

경제적 자유 및 개인적 자유 성향으로 본 이념 분포와 신뢰의 국제비교

김 진 영*

논문 초록

본고에서는 경제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라는 두 가지 축으로 세계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자료로부터 이념좌표를 구성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식별하여 제시하고 국가별 이념좌표를 구성하여 국가 간 비교를 시도하고 우리나라가 보이는 특징을 찾아본다. 2000년대 말에 시행된 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는 반면 개인적 자유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자신이 인식하는 좌-우 이념의 기준이 경제적 자유보다는 개인적 자유에 경도되어 있어 다른 나라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가수준에서는 개인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을수록 신뢰가 높은 경향을 보여서 사회적 자본 축적이 개인의 이념성향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 주제어: 이념분포, 신뢰, 세계가치관조사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A13, P51, Z10

투고 일자: 2018. 3. 27. 심사 및 수정 일자: 2018. 4. 25. 게재 확정 일자: 2018. 4. 27.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mail: jykml9@konkuk.ac.kr

I. 머리말

우리는 흔히 좌-우라는 한 가지 축으로 한 사람의 이념의 이념성향을 이해하곤 하지만 현실적으로 좌-우를 근거로 하는 이념 좌표는 혼란의 여지가 많다. 무엇을 기준으로, 어떠한 면에서 좌-우를 가를 수 있는지가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국가별로 이념 좌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 문헌을 통해 제시하고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설문자료로부터 이념 지표를 도출한 후 이 지표의 국가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이념좌표 구성 기준은 경제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라는 두 가지 축이다. 세계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 이하 WVS) 자료로부터 이념좌표를 구성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식별하여 제시하고 실제로 이념좌표를 구성하여 국가 간 비교를 시도해 보며 우리나라가 보이는 특징을 찾아본다.

더 나아가 본고에서는 국가 별 신뢰 수준 지표를 도출하여 국가 수준에서 이념 지표와 신뢰 지표 사이의 관계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학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신뢰 수준이 낮고 이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널리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 이러한 공감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사회 구성원 간 상호 신뢰를 끌어올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탐구는 경제학에서도 자연스러운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과제들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국가수준에서 신뢰가 이념성향과도 무관치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경제학 이론의 측면에서 신뢰는 거래비용을 낮추고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찍이 Arrow(1972)는 거의 모든 거래가 그 자체에 신뢰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후진성의 상당부분은 상호 신뢰의 결핍으로 설명될 수 있으리라 주장한 바 있다.²⁾ 실증적인 측면에

1) 예컨대 이동원, 정갑영 외(2009)에서는 경쟁력이자 선진화의 조건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전개되기도 했다. 신뢰는 때로는 사회적 자본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며 사회적 자본의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우천식 외(2007)에서는 신뢰의 제고를 선진 한국을 위한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바도 있다.

2) "Virtually every commercial transaction has within itself an element of trust, certainly any transaction conducted over a period of time. It can be plausibly argued that much of the economic backwardness in the world can be explained by the lack of mutual confidence."

서는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을 통해 신뢰와 경제성장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발견되고 있다. 인과관계까지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적어도 신뢰와 경제성장이 함께 가는 것이라고까지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³⁾

굳이 경제성장과 연관을 짓지 않더라도 구성원들끼리 서로를 믿는 사회가 서로 불신하는 사회보다는 좋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신뢰는 상대방이 나에게 적대적이지 않고 비슷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나와 비슷하다고 할 때 생김새 등 물리적 특징과 함께 사고방식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고방식에서 이념 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 이념과 신뢰사이의 인과관계 여부까지를 규명하지는 못하지만 양자 간의 상관관계는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양자 간의 의미 있는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향후 이념 분포와 신뢰수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에 대한 탐구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의미 있는 패턴의 발견은 중요한 질문에 해답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또 다른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이어지는 제Ⅱ장에서는 이념좌표를 구성하는 개념 틀에 대해 설명한다. 제Ⅲ장에서는 Ⅱ장의 개념 틀을 바탕으로 WVS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이념좌표 및 이념분포를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대해 개인의 이념좌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국가수준에서 이념성향과 신뢰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 제Ⅴ장은 맺는말이다.

Ⅱ. 이념 좌표 구성의 개념 틀 - Nolan Chart

David Nolan은 정치적 성향을 단순히 좌파와 우파로 구분 짓는 것은 사람들의 가치판단 기준을 지나치게 단순히 파악한 것이라는 비판을 가하며, ‘개인적 자유권’과 ‘경제적 자유권’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2차원적으로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을 구분하는 것이 보다 유용하다고 주장한바 있다.⁴⁾ Nolan이 제시한 ‘개인적 자유권’이란 언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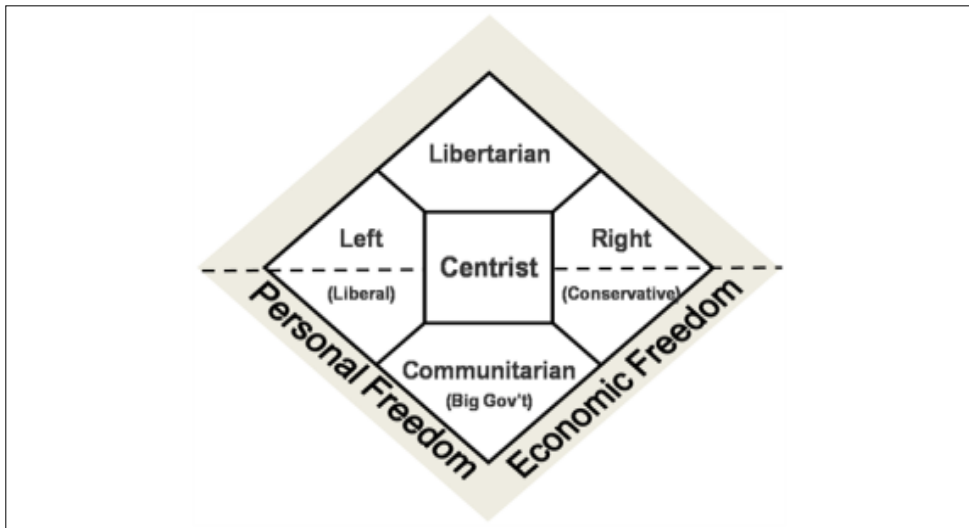
3) 신뢰와 경제성장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Zak and Knack (2001)에서 엄밀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Algan and Cahuc (2014), Bjørnskov (2017) 등은 신뢰와 경제성장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들을 폭넓게 개관하고 있다.

4) 놀란 차트에 대한 개략적 설명은 다음을 참조. https://en.wikipedia.org/wiki/Nolan_Chart

자유, 사생활 보호 등 개인 생활에 대한 자유권 보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지를 의미한다. 한편, ‘경제적 자유권’이란 경쟁적 기업 활동, 효율성 등 경제생활에 대한 자유권 보장에 대한 가치 부여를 어느 정도 하는지를 의미한다.

Nolan Chart에 의하면, ‘개인적 자유권’과 ‘경제적 자유권’을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유주의자(Libertarian)’, ‘진보주의자(Liberal)’, ‘중도주의자(Centrist)’, ‘보수주의자(Conservative)’, ‘권위주의자(Authoritarian)’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개인적 자유권 보장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경제적 자유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진보주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보수주의는 경제적 자유권 보장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개인적 문제에 있어서는 종교적 가치나 윤리, 애국심, 국민건강 등을 이유로 국가의 개입을 허용한다. 한편, 자유와 경제 모든 측면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추구하는 경우 자유주의자이며, 그 반대인 경우는 진보주의자이고 개인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두 영역에서 중도의 입장을 보이는 경우 중도주의자이다. 이와 관련한 Nolan Chart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Nolan Chart에 의거한 다섯 가지 정치적 성향



문제는 “경제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라는 두 가지 축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며 각 집단 사이의 차이를 어떤 변수들을 통해 뽑아내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아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다.

Ⅲ. 국가별 이념분포

이번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경제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라는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WVS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이념 분포를 도출하게 된다. 분석대상은 OECD에 속하면서 WVS 5차 연도 조사에 임했던 21개 국가들이며 설문이 행해진 연도는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2005~2007년 사이에 들어간다. 두 가지 축에 의한 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이념 지향을 구분하는 좌-우 틀에 대해서 국가별 차이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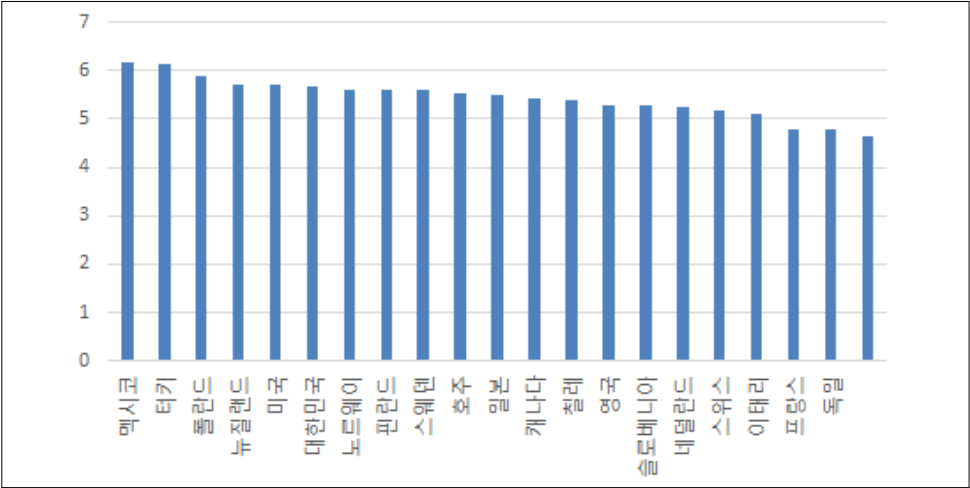
1. 좌-우에 대한 인식

국가수준에서 좌-우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자. WVS는 본인의 이념이 “좌”인지 “우”인지에 대해 10점 척도로 질문하고 있다. 따라서 5나 6의 값이 중도가 되고 가장 왼쪽이 1 가장 오른쪽이 10의 값을 갖는다. 여기서는 개인들의 자기 평가에서 도출된 평균값을 국가의 대푯값으로 정했다. 이제 제 5차 WVS 자료를 바탕으로 정치성향 값을 도출하여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⁵⁾ 그림에서도 나타나듯이 OECD 국가 중 가장 우파 성향을 보이는 국가들은 멕시코와 터키 등 가장 늦게 OECD에 가입한 나라들이며 뉴질랜드와 미국 등 시장 지향성이 강한 나라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상당히 우파 성향이 높은 나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세 유럽 국가들은 좌파성향이 높은 나라들이다.

한편 정치성향의 표준편차는 정치 성향이 얼마나 모여 있느냐에 대한 지표로 한 나라의 통합 정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은 표준편차를 큰 나라부터 제시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가장 우파적 성향을 보인 두 나라의 표준편차가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 두 나라를 제외한다면 평균값과 표준편차 사이에 큰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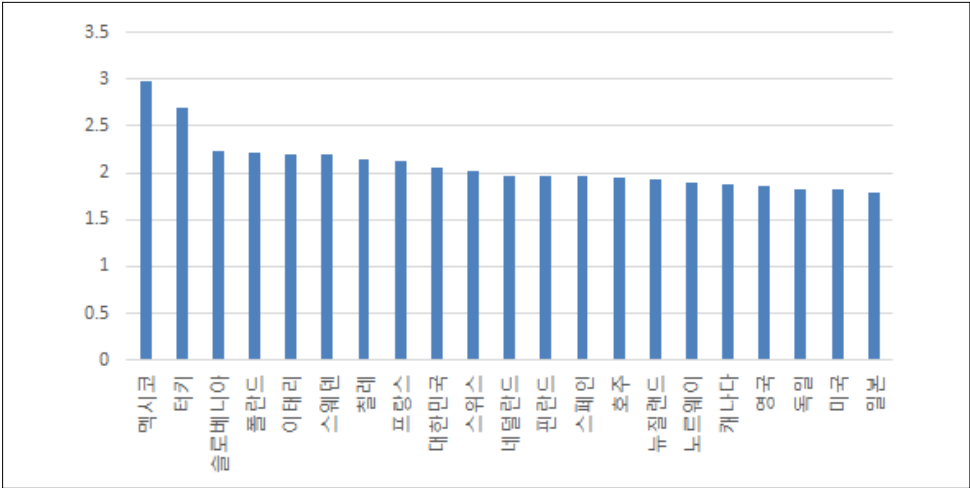
5) 이하의 일부 표나 그림들에서는 각 국가를 영어 두자 약자로 표시했으며 약어는 세계가치관조사에서 주어진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 분석에 포함된 국가와 알파벳 약어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KR), 호주(AU), 캐나다(CA), 스위스(CH), 칠레(CL), 독일(DE), 스페인(ES), 핀란드(FI), 프랑스(FR), 영국(GB), 이탈리아(IT), 일본(JP), 멕시코(MX), 네덜란드(NL), 노르웨이(NO), 뉴질랜드(NZ), 폴란드(PL), 스웨덴(SE), 슬로베니아(SI), 터키(TR), 미국(US).

〈그림 2〉 OECD 국가들의 좌-우 성향 평균



자료: World Value Survey 5차 조사.

〈그림 3〉 OECD 국가들의 좌-우 성향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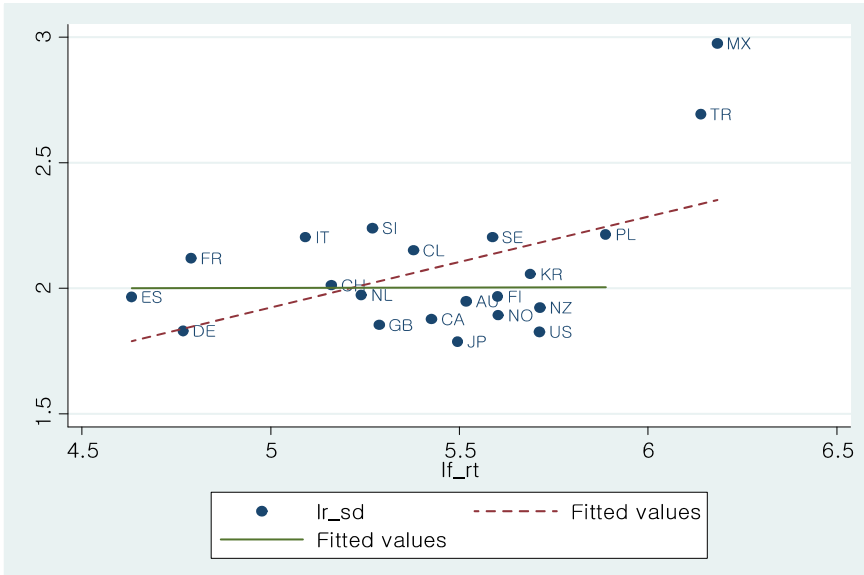


자료: World Value Survey 5차 조사.

그런데 좌-우 성향의 평균 및 표준편차 사이의 관계를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좌파 성향이 강하며 편차는 약해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⁶⁾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이는 소득이 오를수록 사회의 통합도가 높아질 개연성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이하의 분석에서 소득은 조사기간의 중간연도인 2006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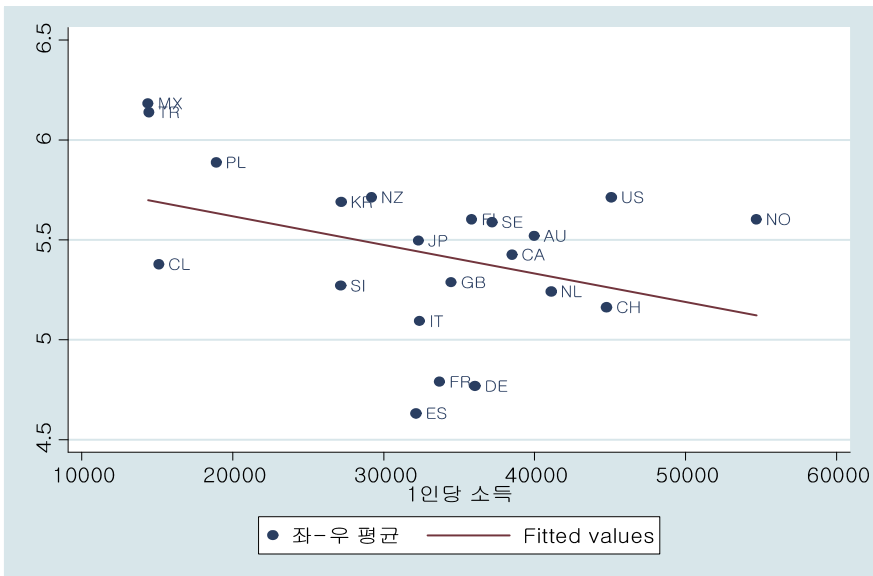
〈그림 4〉 이념성향의 평균과 표준편차



주: 멕시코와 터키를 포함한 추세선과 제외한 추세선을 함께 제시.

자료: World Value Survey 5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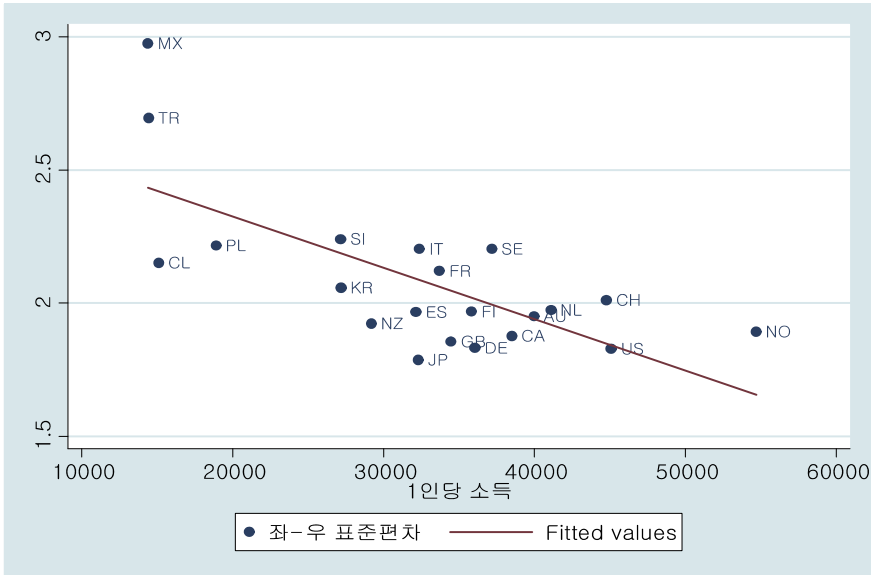
〈그림 5〉 국민소득과 좌-우 지표 평균



주: 가로축의 1인당 소득은 2006년 소득(US \$)이며, 세로축은 1~10점 척도 평균.

자료: 소득은 OECD Data에서 추출, 좌-우 지표는 World Value Survey 5차 조사 자료에서 도출.

〈그림 6〉 1인당 소득과 좌-우 성향 표준편차



주: 가로축의 1인당 소득은 2006년 소득(US \$)이며, 세로축은 1-10점 척도의 표준편차.
 자료: 소득은 OECD Data에서 추출, 좌-우 지표는 World Value Survey 5차 조사 자료에서 도출.

2.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자.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인식은 얼마나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갖는지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인식 지표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용인정도(소득 불평등도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질수록 높은 값), 사적소유와 정부소유(사적소유를 선호할수록 높은 값), 경쟁 선호 정도(경쟁을 선호할수록 높은 값), 부에 대한 인식(부의 축적은 다른 사람의 희생위에서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질수록 낮은 값) 등 네 가지 질문으로부터 도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네 개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⁷⁾

- “소득은 더 평등해야 한다(1점)” 대 “개인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더 많은 유인이 있어야 한다(10점)”
- “사업과 산업에서 정부소유가 증가해야 한다(1점)” 대 “사업이나 산업에서 사적 소

7) 원 질문에서는 1점과 10점의 견해가 반대로 주어진 경우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점수를 조정하였다.

유가 증가해야 한다(10점)”

- “경쟁은 인간의 나쁜 면을 끌어내는 해로운 것이다(1점)” 대 “경쟁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촉진시킨다(10점)”
- “다른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1점)” 대 “부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증가할 수 있다(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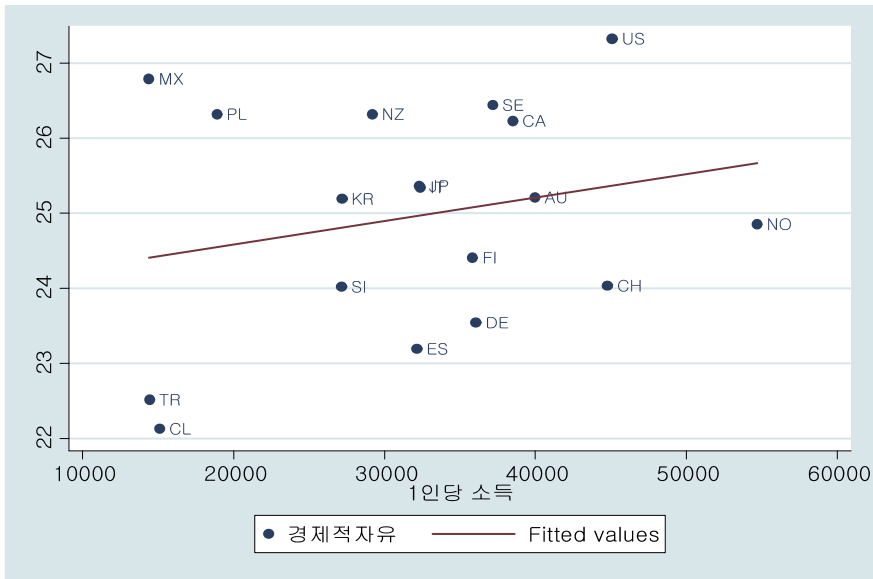
위의 네 가지 질문들이 모두 1~10점의 척도를 갖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인식은 4에서 40점까지 분포하며 40에 가까울수록 시장지향적인 성향, 혹은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성향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수준에서 이 지표를 평균해 보면 미국이 가장 높은 값을 가졌으며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의 값을 보이고 있다. 가장 우파 성향을 보였던 터키와 멕시코가 이 지표를 도출해 보면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도 흥미로운 현상이다. 멕시코 국민의 평균적인 인식이 매우 시장 지향적인데 비해 터키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용인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한편 스칸디나비아 3국도 이 지표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인 추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이 지표도 높다.

우리나라는 평균 25.2점으로 이 지표값을 도출할 수 있는 OECD 18개 국가들의 평균값보다 높지만 경제적 자유지향성이 높은 순으로 정리했을 때 순위 상으로는 10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용인이라는 면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관대한 응답을 보이고 있다(경제적 자유지향성 순위로 21개국 중 1위).⁸⁾ 한편 사업 및 산업에서 정부 소유가 증가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은 질문에서는 매우 시장 지향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경제적 자유지향성 순위로는 18개국 중 15위). 경쟁에 대한 견해는 다른(경제적 자유지향성 순위로는 21개국 중 11위) 정도이며 다른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 편이었다(경제적 자유지향성 순위로는 21개국 중 16위).

8) 현재의 높은 재분배 요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상당히 의외의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2005-2007년 사이의 결과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인식에서 조사 연도에 따른 차이가 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소득과 경제적 자유 지표



주: 가로축의 1인당 소득은 2006년 소득(US \$)임.
자료: 소득은 OECD Data에서 추출, 경제적 자유 지표는 World Value Survey 5차 조사 자료에서 도출.

〈표 1〉 OECD 국가들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인식

	소득불평등 용인	사적소유와 정부소유	경쟁 선호	부에 대한 견해	경제 합
대한민국	6.59 (1위)	5.46 (15위)	7.12 (11위)	6.02 (16위)	25.19 (10위)
호주	5.67	6.12	7.23	6.17	25.21
캐나다	5.64	6.65	7.16	6.75	26.23
스위스	3.63	6.28	7.21	6.81	24.03
칠레	4.78	4.65	6.14	6.41	22.13
독일	4.40	5.92	7.06	6.15	23.54
스페인	5.65	5.57	6.80	5.03	23.19
핀란드	4.98	6.32	6.96	6.11	24.41
프랑스	5.04	n/a	5.97	6.14	n/a
영국	5.41	n/a	6.82	6.02	n/a
이탈리아	5.94	6.11	6.58	6.62	25.34
일본	6.15	6.36	6.70	6.09	25.36
멕시코	6.11	5.37	7.78 (1위)	7.57 (1위)	26.79
네덜란드	5.63	n/a	6.31	5.75	n/a
노르웨이	5.07	5.70	7.51	6.55	24.85
뉴질랜드	5.43	6.85	7.73	6.29	26.32
폴란드	5.43	6.85	7.73	6.29	26.32
스웨덴	6.09	6.22	7.62	6.56	26.44
슬로베니아	4.69	6.20	7.23	5.69	24.02
터키	4.97	5.11	6.80	5.52	22.51
미국	6.18	7.39 (1위)	7.57	6.19	2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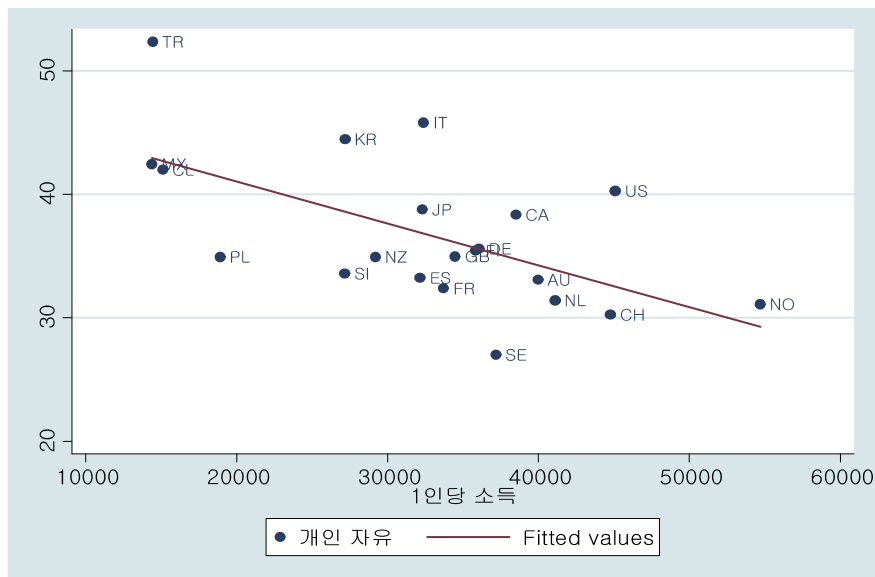
주: 우리나라의 순위와 1위 순위만을 표시함.

3. 개인적 자유

이제 개인적 자유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자. 개인적 자유에 대한 인식 지표는 (1) 동성애, (2) 매춘, (3) 낙태, (4) 이혼, (5) 안락사, (6) 자살 등 논쟁이 될 수 있는 행동 내지 행태에 대해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를 묻는 질문으로부터 도출되었다. WVS에서는 상기 행동이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지를 10점 척도로 질문하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근거로 개인의 자유를 더 용인하지 못한다는 쪽이 10점이 되도록 하고 여섯 질문에 대한 응답의 합을 도출하여 지표로 삼았다. 용인 못하는 쪽이 10점이 되도록 한 이유는 이러한 행동을 용인하지 못할수록 보수 성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을 우파라고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각 국가별 평균을 도출해 보면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낮은 값을 가지며 터키, 이태리, 우리나라 등이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1인당 소득이 높을수록 이 값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적 자유에 대한 용인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림 8〉 1인당 소득과 개인적 자유



주: 가로축 1인당 소득은 2006년 소득(US \$)이며, 세로축은 1-10점 척도 평균.

자료: 소득은 OECD Data에서 추출, 개인적 자유 지표는 World Value Survey 5차 조사 자료에서 도출.

〈표 2〉 OECD 국가들의 개인적 자유에 대한 인식

	동성애 용인 못함	매춘 용인 못함	낙태 용인 못함	이혼 용인 못함	안락사 용인 못함	자살 용인 못함	개인적 자유 (역순)
대한민국	8.08 (2위)	8.46 (4위)	7.42 (5위)	6.24 (2위)	6.19 (5위)	8.07 (8위)	44.45 (3위)
호주	5.17	6.32	5.25	4.26	4.41	7.73	33.06
캐나다	5.25	7.76	6.39	4.90	5.70	8.24	38.33
스위스	3.84	6.12	5.44	4.11	4.35	6.57	30.24
칠레	5.87	7.28	8.21	4.75	7.02	8.58	41.96
독일	4.74	6.66	5.96	4.46	6.17	7.47	35.57
스페인	4.35	6.36	5.50	3.91	5.38	7.94	33.21
핀란드	5.10	7.87	5.53	4.25	5.19	7.73	35.45
프랑스	4.55	7.68	4.57	4.15	4.23	7.27	32.39
영국	5.34	7.09	6.05	4.59	4.95	7.18	34.99
이탈리아	7.66	8.57	7.46	5.96	7.09	8.93	45.80
일본	6.23	8.97	6.41	4.55	4.53	8.12	38.77
멕시코	6.47	7.11	7.84	5.75	6.74	8.44	42.43
네덜란드	3.87	5.48	5.53	4.59	4.70	7.23	31.41
노르웨이	3.25	6.88	4.29	3.75	5.42	7.56	31.08
뉴질랜드	5.57	6.49	5.73	4.34	4.81	8.05	34.94
폴란드	5.57	6.49	5.73	4.34	4.81	8.05	34.94
스웨덴	2.59	7.91	3.15	2.61	4.27	6.62	26.97
슬로베니아	5.52	6.67	4.83	4.04	5.50	7.20	33.57
터키	9.25 (1위)	9.25 (1위)	8.66 (1위)	7.53 (1위)	8.16 (1위)	9.48 (1위)	52.35 (1위)
미국	6.50	7.81	6.54	5.19	6.03	8.26	40.27

4. 경제적 자유-개인적 자유의 국가별 분포

이제 앞서 제시한 Nolan Chart에 근거해 2차원 이념 좌표를 구성해 본다. 이념 지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불평등 용인, 사적소유 대 정부소유, 경쟁의 바람직함, 부의 축적에 대한 견해로 4점~40점 사이에 분포하는 “경제적 자유 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가로축으로 삼는다. 이어 성애, 매춘, 낙태, 이혼, 안락사, 자살, 등의 용인 정도로 6점~60점 사이로 분포하는 “개인적 자유 지표”를 구성하고 이를 세로축으로 삼는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경제적 자유지표와 개인적 자유지표의 평균값을 두 축으로 하여 4개의 분면을 구성한다.

위와 같이 구성된 사분면에서 제 1사분면은 경제적 자유 측면에서는 친시장적이면

서 개인적 자유 측면에서는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이 집단에 속할 경우 보수주의자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제 2사분면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정부의 개입을 선호하는 친개입주의자이지만 개인적 자유에서는 보수적인 사람들을 표시한다. 이 집단에 속할 경우 권위주의자로 명명하기로 한다. 1사분면과 2사분면 모두 도덕적인 측면에서 전통을 고수하는 보수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제 3사분면은 정부개입을 선호하는 한편으로 개인적 자유를 많이 용인하는 성향을 가진다. 이들을 진보주의자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마지막 제 4사분면은 시장지향적 이면서 논쟁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 개인적인 자유를 크게 용인하는 입장으로 이들을 자유주의자라고 칭하기로 하자.⁹⁾

이렇게 4개의 집단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중도 성향을 따로 분리할 수도 있다. 다소 자의적이지만 여기서는 경제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에서 모두 그 분포가 중간인 40%, 즉 30분위에서 70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을 중도로 분류하기로 한다.

OECD 국가들 중에서 개인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축으로 이념좌표를 구할 수 있는 나라들에 대해 각국의 이념 분포들을 도출해 보자. 우선 개인의 이념 성향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에 대해 생각해 본다. 본 절에서는 국가비교를 위해 전체 국가 표본을 대상으로 개인적 자유 및 경제적 자유 중간값을 구해서 기준으로 한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국가들은 대한민국, 호주, 미국, 슬로베니아, 스웨덴, 폴란드, 노르웨이, 멕시코, 캐나다, 스위스, 칠레, 독일, 스페인, 핀란드, 이탈리아, 일본 등 16개 국가이다. 표본에 포함된 OECD 국가의 경제적 자유 지수의 중간값은 25이며 개인적 자유 지수의 중간값은 36이다. 이 값들을 기준으로 각국별로 네 개의 집단이 형성될 수 있다. 한편 경제적 자유 지수의 경우 30분위 값은 22이고 70분위 값은 28이며 개인적 자유 지수의 경우에는 30분위 값이 29이고 70분위 값은 44이다. 두 지수에서 모두 30분위와 70분위 사이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각 국가 별로 5개의 집단이 형성될 수 있다.

9) 이상의 각 좌표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과 이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놀란 차트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놀란 차트에서 붙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표 3〉 세계가치관 조사 자료에 따른 이념의 구분

↑ 개인적 자유(Personal Freedom) ; 동성애, 매춘, 낙태, 이혼, 안락사, 자살, 등의 용인 정도로 도출 했으며 6점-60점 분포 ⇒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 ; 소득불평등 용인, 사적소유 대 정부소유, 경쟁의 바람직함, 부의 축적에 대한 견해로 도출했으며 4점-40점 분포
--

제 1 구분

친개입 보수 (pro-intervention conserve) ‘권위주의자(Authoritarian)’	친시장 보수 (pro-market conserve) ‘보수주의자(Conservative)’
친개입 자유주의 (Pro-intervention liberal) ‘진보주의자(Liberal)’	친시장 자유주의 (pro-market liberal) ‘자유주의자(Libertarian)’

제 2 구분 (중도성향 추가)

pro-intervention conserve	pro-market conserve	
Authoritarian	양측 모두 중도 성향 (30~70 percentile) ‘중도주의자(Centrist)’	Conservative
Liberal		Libertarian
Pro-intervention liberal	pro-market liberal	

〈표 4〉는 OECD 국가들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보수, 권위, 진보, 자유, 중도라는 네 개 혹은 다섯 개 집단으로 나누어 보고 각국의 집단별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이념 분포는 국가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보수와 권위주의자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즉 개인적 자유에 대한 용납도가 낮은 편이다. 그 중에서도 보수주의자 보다는 권위주의자가 많아 경제적으로는 정부 개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분포는 폴란드나 칠레 같이 구 사회주의권이나 OECD 가입이 늦은 나라들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진보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의 비중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여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북구 국가들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구 국가들도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어서 스웨덴은 자유주의자의 비중이 절반이 넘는 반면 핀란드는 그 비중이 훨씬 낮다. 한편 미국, 이탈리아, 멕시코, 일본 등은 개인적 자유에 대한 용인도가 북구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권위주의자들보다는 보수주의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나라들이다.

중도를 포함하더라도 보수-권위-진보-자유 분포에서 보이는 국가별 특징은 유지되는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중도의 비중이 높은 나라로 볼 수 있다. 다음 장의 분석에서

는 중도를 포함한 5집단 구분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표 4〉 각국의 이념분포

국가	4집단 구분				5집단 구분				
	보수	권위	진보	자유	중도	보수	권위	진보	자유
대한민국	33.83 (7위)	42.92 (3위)	9.42 (14위)	13.83 (13위)	23.83 (3위)	27.75 (7위)	34.58 (3위)	5.58 (14위)	8.25 (13위)
호주	20.2	20.2	26.39	33.22	20.69	16.82	14.5	21.11	26.88
캐나다	37.75	25.09	11.92	25.23	20.24	32.9	19.55	8.64	18.67
스위스	19.1	21.35	29.57	29.98	17.57	16.04	16.68	24.74	24.98
칠레	25.8	46.8	18	9.4	18	22.6	39.5	13.4	6.5
독일	25.19	31.1	22.97	20.74	19.48	22.09	24.61	17.78	16.04
스페인	19.5	27.67	32.17	20.67	18.83	17.33	22.17	25.58	16.08
핀란드	19.13	28.21	25.54	27.12	24.75	15.09	21.1	18.44	20.61
이탈리아	46.44	36.07	8.99	8.5	13.14	42.69	31.23	6.82	6.13
일본	40.42	24.36	10.95	24.27	22.81	35.86	16.88	5.38	19.07
멕시코	42.5	27.31	11.79	18.4	14.87	39.23	22.18	8.27	15.45
노르웨이	12.88	18.34	32.78	36	27.61	9.37	11.8	23.9	27.32
폴란드	40.4	45.6	6.6	7.4	10.5	38.4	40.6	5	5.5
스웨덴	13.06	9.87	24.13	52.94	15.35	10.97	7.08	20.94	45.66
슬로베니아	27.68	23.24	22.66	26.42	13.21	25.36	19.77	18.8	22.85
미국	42.35	21.7	12.17	23.78	20.5	38.19	16.17	7.29	17.85

주: 우리나라의 순위는 16개국 중 각 집단의 비중을 높은 순으로 정렬할 때 순위임.

5. 경제적 자유, 개인적 자유, 좌와 우

앞서 경제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라는 두 개의 견해를 바탕으로 각국의 이념 좌표를 구성해 보았다. 이제 이러한 2차원의 이념 좌표와 좌-우라는 1차원 이념 좌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표 5〉는 각 국가별로 개인 단위에서 좌-우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설명하는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종속변수는 10점 척도로 본인이 평가한 좌-우 성향이며 설명변수로는 소득, 교육 수준, 성, 연령, 경제적 자유에 대한 견해와 개인적 자유에 대한 견해 등을 회귀식에 포함하였다.¹⁰⁾ 회귀분석 결과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경제적 자

10) 소득과 교육수준 변수는 범주형 변수로 주어져 있다. 숫자가 클수록 높은 소득 혹은 교육수준을 의미하지만 계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계수의 크기로 국가별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

유 및 개인의 자유에 대한 견해에서 높은 값을 가질수록 우파 성향을 보인다는 것은 눈에 띄는 공통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견해가 좌-우의 정치적 좌표의 결정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를 보인다. 즉,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우파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좌-우의 구분이 시장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 외의 다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그 원인을 WVS 자료만으로 찾아내기는 어렵다. 자료로 뒷받침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좌-우 이념 결정요인이 북한에 대한 태도 혹은 용인도와 관계가 깊기 때문일 수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자신을 우파라고 생각하고 북한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이해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좌파라고 생각할 때 시장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이념좌표를 설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자유에 대한 지향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좌-우 이념좌표보다는 본고에서 제시한 2차원 좌표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한 예가 다음 절에서 제시할 이념과 신뢰와의 관계이다.

〈표 5〉 국가별 좌-우 성향 결정 요인

	한국	일본	미국	멕시코	터키	스웨덴	핀란드	독일
소득	-0.000298 (0.0330)	-0.0238 (0.0292)	0.0749*** (0.0282)	0.00850 (0.0347)	-0.00587 (0.0404)	0.0265 (0.0240)	0.0789*** (0.0278)	0.0247 (0.0287)
교육	-0.00640 (0.0221)	-0.0415 (0.0314)	-0.0404 (0.0308)	-0.0892*** (0.0252)	-0.111*** (0.0261)	0.0668*** (0.0199)	0.0677*** (0.0202)	-0.0772*** (0.0130)
개인 자유	0.0200*** (0.00575)	0.0337*** (0.00827)	0.0461*** (0.00426)	0.00790 (0.00712)	0.0694*** (0.0103)	0.0133* (0.00744)	0.0218*** (0.00604)	0.00723 (0.00443)
경제 자유	-0.0184 (0.0117)	0.0420** (0.0181)	0.0982*** (0.0102)	0.0150 (0.0143)	0.0535*** (0.0155)	0.200*** (0.0124)	0.132*** (0.0133)	0.0768*** (0.0101)
남성	0.195* (0.113)	-0.0189 (0.157)	0.0745 (0.101)	0.0584 (0.176)	0.421** (0.166)	0.217* (0.131)	0.0706 (0.130)	0.174* (0.100)
연령	0.0438*** (0.00483)	0.00386 (0.00551)	-0.00693** (0.00312)	0.000941 (0.00655)	-0.00429 (0.00648)	0.00876** (0.00431)	0.00689* (0.00416)	-0.00776** (0.00311)
상수	3.106*** (0.606)	3.356*** (0.839)	1.955*** (0.515)	6.654*** (0.574)	2.862*** (0.933)	-0.308 (0.604)	0.917 (0.630)	4.105*** (0.408)
Obs.	1,191	558	1,071	1,120	992	799	788	1,309
R-squared	0.129	0.058	0.193	0.020	0.114	0.307	0.170	0.075

주: 괄호안은 표준오차, *** $p < 0.01$, ** $p < 0.05$, * $p < 0.1$.

IV. 이념과 신뢰

이번 절에서는 앞 절에서 도출한 이념분포와 신뢰의 관계에 대해 국가수준에서 살펴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신뢰지표의 구성이 필요하다. WVS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신뢰지표로는 여러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다른 연구나 국가비교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신뢰지표와 함께 다른 신뢰지표와 기관에 대한 신뢰지표까지 도출해 본다.

1. 신뢰지표

첫 번째 신뢰지표는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대답한 경우에는 1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두 번째의 신뢰지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공정하게(fair) 대한다고 생각하느냐는 10점 척도의 설문에서 도출된 지표이다. 세 번째 지표는 사회의 각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 도출된 지표이다. WVS에서는 언론, 노조, 경찰, 의회, TV, 정부, 정당, 기업, 사법 등의 기관에 대한 신뢰정도를 4점 척도로 질문하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 중 좌-우라는 성향이 크게 반영될 노조에 대한 신뢰를 제외한 여러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를 합하여 32점 만점의 척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상의 여러 신뢰지표들은 유사하면서도 다른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두 신뢰 지표는 타인에 대한 신뢰로서 어느 정도 유사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두번째 신뢰가 0/1 지표인 첫 번째 신뢰보다는 1에서 10까지 분포한 값을 갖는다는 점에서 개인단위 분석에서 이용가치가 높을 수 있다.

한편 세 번째 지표는 개인단위가 아닌 기관에 대한 지표라는 점에서 보다 신뢰가 높은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기울일 수 있는 노력에 대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인의 이념성향에 따라 각 기관에 대한 신뢰가 다르다면 이러한 정보도 사회통합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표 6〉은 OECD 국가들의 신뢰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널리 인용되는 신뢰 지표 1은 터키의 0.04에서 노르웨이의 0.74까지 분포되어 있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북구 국가들은 개인 신뢰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멕시코 칠레 등의 남미 국가 등은 신뢰가 매우 낮다. 신뢰가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이다. 우리나라는 0.3정도로 분석 대상 21개 국가의 평균보다 낮은 값이며 순위로는 14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다른 사

람들이 나를 이용하려 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도출된 지수는 OECD 평균보다 높고 순위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한다. 대체적으로 개인 신뢰 지수들 사이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상관계수는 0.8에 달한다.

한편 기관신뢰도 개인 신뢰와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개인 신뢰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국가 간 편차는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관에 대한 신뢰는 언론, 경찰, 의회, TV, 정부, 정당, 기업, 사법 등에 대한 신뢰도로부터 도출된 지수이다. 이 지수는 최고 8에서 32까지 분포되어 있어 그 중간값은 20이다. 21개 OECD 국가들의 이 지수 평균값이 18.75라는 것은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관 신뢰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보다 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은 나라들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북구 국가들과 스위스, 그리고 일본과 터키뿐이다.

〈표 6〉 OECD 국가들의 신뢰지표(2005~2007 wave)

	개인 신뢰 1	개인 신뢰 2	기관 신뢰
대한민국	0.30 (14위)	6.65 (4위)	19.28 (7위)
호주	0.48	6.39	18.29
캐나다	0.42	6.42	19.17
스위스	0.51	6.91	20.22
칠레	0.12	4.99	17.84
독일	0.34	5.51	17.59
스페인	0.20	5.17	18.97
핀란드	0.59	6.63	20.79
프랑스	0.19	6.12	17.58
영국	0.30	6.01	18.10
이탈리아	0.29	5.50	17.92
일본	0.39	5.50	19.60
멕시코	0.16	6.30	17.68
네덜란드	0.44	6.43	17.77
노르웨이	0.74	7.28	20.83
뉴질랜드	0.51		18.56
폴란드	0.51		18.56
스웨덴	0.68	7.15	20.07
슬로베니아	0.18	5.53	16.83
터키	0.05	4.70	19.94
미국	0.40	5.78	18.22
평균	0.37	6.05	1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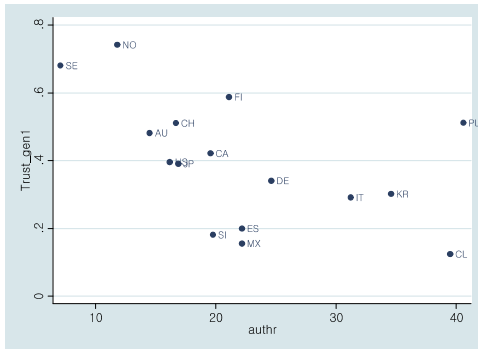
2. 이념분포와 신뢰

과연 이념분포 상 어떤 집단이 많은 나라들이 신뢰가 높을까? 이에 대해서는 선형적으로, 이론적으로 답을 내기는 어렵다. 우선 자료에서 보이는 패턴을 찾아보고 그로부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을 구성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표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념분포와 국가수준에서 도출한 신뢰지수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들을 찾을 수 있다. 〈그림 9〉은 국가수준에서 도출한 이념분포 지표들과 신뢰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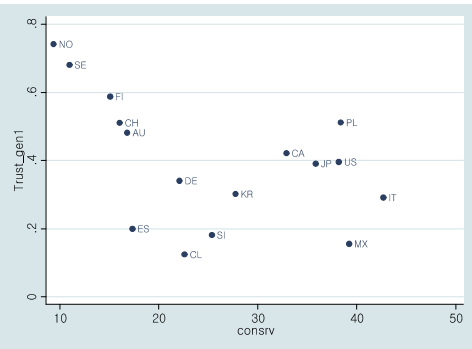
우선 보수주의자와 권위주의자 비중은 신뢰 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즉 개인의 자유에 대한 용인도가 낮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의 신뢰도가 낮은 것이다. 반면 개인의 자유에 대해 중시 여기는 국가들의 신뢰가 높은 편이다. 그 중에서도 자유주의자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신뢰지수가 높은 경향이 가장 뚜렷하다.

〈그림 9〉 이념분포와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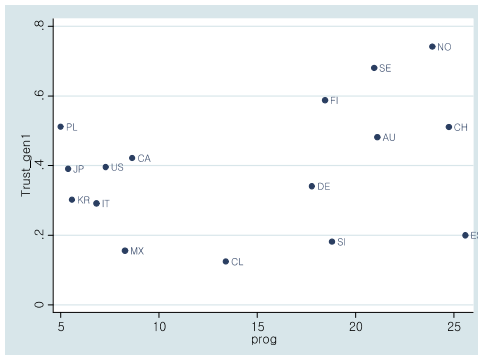
권위주의자 비중과 신뢰도(상관계수 -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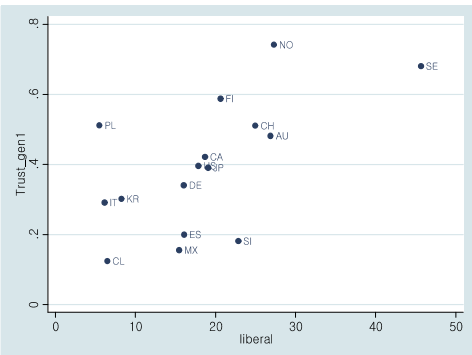
보수주의자 비중과 신뢰(상관계수 -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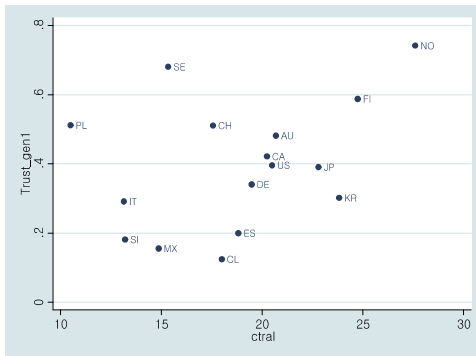
진보주의자 비중과 신뢰(상관계수 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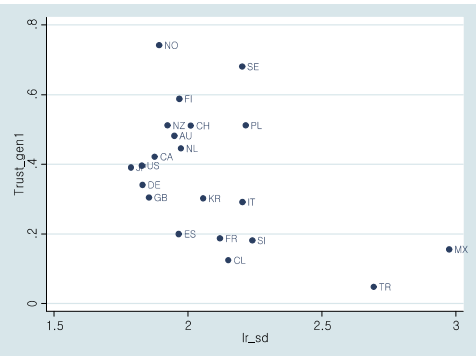
자유주의자 비중과 신뢰지수(상관계수 0.61)



중도비중과 신뢰지수(상관계수 0.36)



좌-우 표준편차와 신뢰(상관계수 -0.49)



이러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더 많은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을 때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상식에도 부합한다. 역으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개인에 대한 신뢰가 낮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편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인식은 신뢰 수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진보주의자나 권위주의자들의 비중이 높을 때 개인 신뢰가 자유주의자나 보수주의자의 비중이 높을 때 보다 국가의 신뢰지수가 낮은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자유 대 보수”나 “진보 대 권위”만큼 극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한편 중도의 비중이 높은 것은 높은 신뢰도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7〉 이념분포와 각 신뢰지표 사이의 상관계수

	개인 신뢰 1	개인 신뢰 2	신뢰(기관)
보수 비중	-0.5678	-0.4604	-0.5325
권위 비중	-0.7071	-0.5544	-0.4277
진보 비중	0.39	0.2718	0.3082
자유 비중	0.7791	0.6704	0.5127
중도 비중	0.516	0.3634	0.6449
관측치 수	16	14	16

주: 모든 상관계수들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0과 다름.

V. 맺는 말

이 글을 통해 경제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라는 틀을 바탕으로 이념 좌표를 구성하고 이념분포를 찾아내어 국가비교를 해 보았으며 이념 분포 혹은 이념 좌표와 신뢰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신뢰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한다. 이런 낮은 신뢰수준은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자들의 비중이 높은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권위주의자들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개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반면, 국가 간 비교에서 자유주의자의 증가와 신뢰수준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물론 자유주의자의 증가로 인해 국가의 신뢰수준이 상승했다는 인과관계가 규명된 것은 아니므로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자유주의자의 증가와 신뢰수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양자 간 인과관계의 유무나 양자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찾는 탐구가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탐구를 위해서는 여러 시점에서 여러 국가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WVS 자료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분석은 국가 수준에서 신뢰 형성이라는 과제에 대한 해답 보다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다고 보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된다. 개인 수준에서 자유주의자들의 신뢰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인지, 혹은 자유주의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 수준에서 신뢰를 높이 것인지 등 여러 질문들이 이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인식과 행동은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 많아질 때 국가 혹은 사회수준에서 신뢰도가 높아질 개연성은 결코 낮지 않다고 생각된다. 개인의 자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믿고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이념 성향이나 사회적 자본, 신뢰 등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 보다는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많이 행해져왔다. 경제학은 이념이나 사고방식보다는 행동에 주목해 왔다. 하지만 사회 통합에 어려움을 주는 이념의 대립이 존재하고 신뢰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도 경제학계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개인의 행동이나 집단적 선택은 결국 사고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사상, 이념, 제도, 행동 등의 다양한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경제학이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치학과 사회학 등 인접학

문과의 많은 교류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매우 초보적인 시도일 뿐이지만 개인의 이념적 성향을 측정하는 방법과 실증적으로 국가 간 비교를 가능케 하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민들의 이념분포와 국가의 경제적 성취 사이의 관계를 심도 있게 연구해 볼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향후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좀 더 많은 나라에 대한 비교분석이나 개인 수준에서 신뢰성향과 이념 좌표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념의 분포가 시간의 흐름 혹은 정권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변해 가는지도 흥미로운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고에서 기관 신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지만 기관신뢰에 대해서도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재와 같이 낮은 사법 신뢰도는 향후 우리나라의 발전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기관신뢰와 관련해서는 국제적 평가와 국민인식에 대한 비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어느 정도 공신력을 지닌 국제기관들에서 평가하는 지수와 국민들의 인식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세계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 경제자유도(Economic Freedom Index) 등에서 나타난 자유도와 국민 의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 본다면 국가의 객관적 상황과 국민의 인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탐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박정수 외, 『시장경제인식 제고 및 정책 대응에 관한 연구: 적정 시장-정부 관계 정립 방향 모색』, KDI-시장경제연구원, 2012.
2. 우천식 외, 『선진 한국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6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07.
3. 이동원·정갑영 외, 『제3의 자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9.
4. Arrow, Kenneth J., "Gifts and Exchange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 1, No. 4, 1972, pp. 343-362.
5. Algan, Yann, and Pierre Cahuc, "Trust, Growth, and Well-Being: New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in Philippe Aghion, Steven Durlauf ed, *Handbook of Economic Growth*, Vol. 2A, 2014, pp. 49-120.
6. Bjørnskov, Christian, "Social Trust and Economic Growth," Eric M. Uslaner, ed. *Oxford Handbook of Social and Political Trust*, 2017.
7. Zak, Paul J., and Stephen Knack, "Trust and Growth," *The Economic Journal*, 111 (April),

2001, pp. 295-321.

8. World Value Survey <http://www.worldvaluessurvey.org/>

Ideological Tendency and the Social Capital: An International Comparison

Jin-Yeong Kim*

Abstract

This paper derives ideological tendencies of OECD countries,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capital and ideological tendency at the national level. We characterize a person's ideological tendency with five categories, namely communitarian, conservative, liberal, libertarian, centrism by applying the concept of the Nolan chart. From the World Value Survey wave 5 data we derive nation's ideological tendency and find that Korea has higher portion of communitarian than most of other OECD countries. We also find that the portion of libertarian, who has strongly supports economic freedom and personal freedom,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trust index at the national level. This finding implies that the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be connected with people's values on the economic and the personal freedom.

Key Words: ideological tendency, economic and personal freedom, trust, social capital

JEL Classification: A13, P51, Z10

Received: March 27, 2018. Revised: April 25, 2018. Accepted: April 27, 2018.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Konkoo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05029, Korea, Phone: +82-2-450-3633, e-mail: jykm19@konkuk.ac.kr